콩나물 농약보도사건 이후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 이번 보도로 두채업계에 약 5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초래 —

보건복지부는 96년 12월에 실시된 콩나물 재배업소 실태조사와 수거검사 실적을 토대로 97. 2. 18 보건복지부청사 2층 비상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콩나물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생산자단체 등 10여명의 전전가들이 참석하여 콩나물 재배업소 실태조사결과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콩나물 안전관리 대책(안)이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중 실태조사결과 및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배업소의 시설실태는

가. 재배시설은 주택지역이나 녹지대(80%)에 위치하고 비닐하우스가 주종(62%)이고

나. 시설규모는 50평 미만이 대부분(86%)이고, 3명 이하(92%)로서 가족단위의 종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다. 재배설비는 살수기(86%)정도만 구비하고 있을뿐 콩나물재배에 필수설비인 원료콩선별기, 살균소독설비, 용수정제시설, 온·습도 조절설비 등은 갖춰있지 못하고

2. 종자콩 관리실태는

가. 종자콩은 대부분 상온에서 보관하고 있어 부패방지와 발아력유지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나. 원가절감을 위해 값싼 저질콩을 사용하므로 품질저하와 수율감소를 초래하

고 있으며

다. 종자수침시 일부 업소에서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고

3. 재배 실태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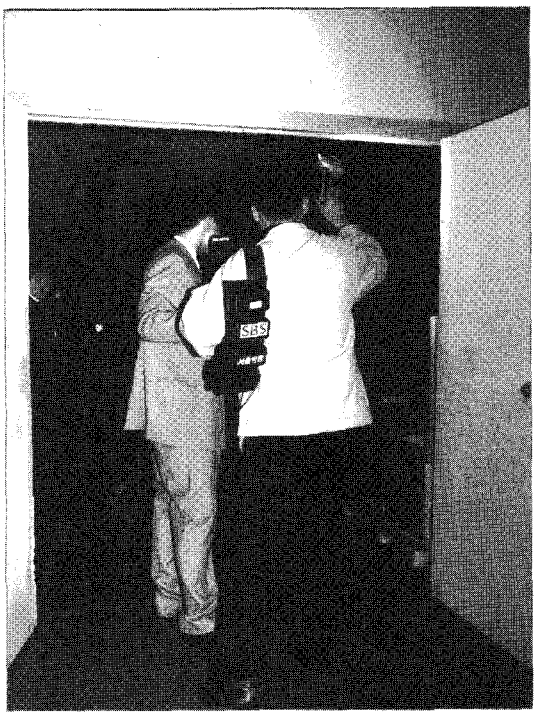
가. 재배용기는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제품을 사용하면서 치아염소산나트륨(NaC10)으로 용기소독을 하고 있으며

나. 콩나물의 재배일수는 대부분 7~8일 정도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다. 잔뿌리 방지와 성장촉진을 위해 대부분 「인돌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라. 콩나물재배를 위한 교육은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재배기술이나 자금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마. 대부분의 업소에서 출하직전 육안으로 선별검사만 할뿐 이화학적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 콩나물은 시중에 유통중인 것을 수거·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속기관에서 주로 콩나물재배업소에서 발아나 생장중인 콩나물을 부당하게 수거·검사하여 발표함으로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고,

4. 콩나물 검사결과로는

96년 12월 콩나물재배 환경실태조사기간동안 수거검사한 29건은 모두 적합품이었고 96년 5~7월 사이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각 시·도에서 국민 다소비 식품검사시에 수거된 490건중 484건(98⁸%)이 적합품이고 6건(1²%)만이 부적합품이었고, 96 11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안전본부 및 각 시도 위생담당부서에서 일제히 수거·검사한 1,026건중 1,014건(98⁸%)이 적합품이었고 나머지 12건(1²%)만이 부적합품으로 판명되어, 보건복지부 관련기관 및 각 시도의 식품위생담당부서에서 96년도 중에 수거·검사한 콩나물 총 1,545건중 1,527건(98⁸%)이 적합품이고 나머지 18건(1²%)만이 부적합품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종합검토사항으로는

1. 위생적인 콩나물을 재배공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콩나물콩을 보급해야하고, 재배시설의 현대화 등 시설개선에 농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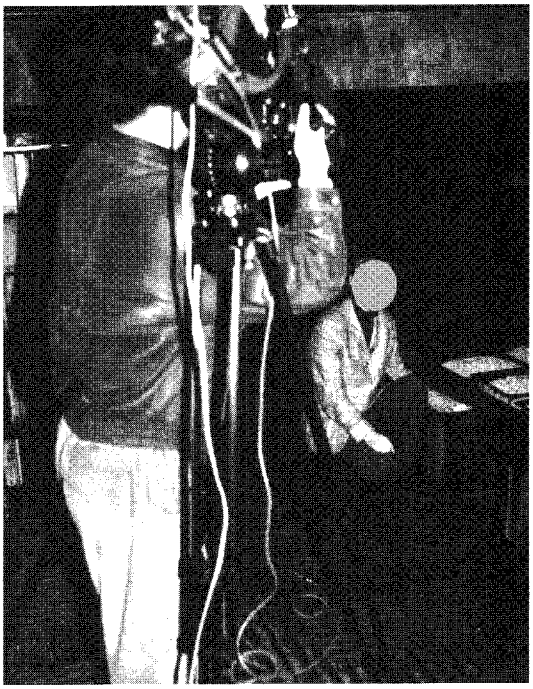
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무해 소독제를 개발 보급하고 반드시 시중에 유통중에 있는 콩나물을 수거 검사 하여야 할 것이고,

2. 콩나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설정은 콩나물재배시 농약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원료콩에서 불가피하게 이행되는 경우 잔류 농약의 이행 정도와 콩나물의 섭취량, 농약별 유해정도를 파악한 후에 잔류농약기준 설정을 검토할 것이고, 그동안 수거·검사자료와 콩나물의 섭취량, 농약별 유해정도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위생연구원에서 97년도 상반기중 연구를 실시할 것이며,

3. 국민이 안심하고 콩나물을 먹을 수 있게끔 유통중인 콩나물 수거·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대책(안)을 놓고 이날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의 회의는 열띤 토론끝에 소비자단체 2명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인체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콩나물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하여 콩나물에 대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치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로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마치게 되었다.

콩나물 농약사용의 보도

보건복지부는 97년 3월 5일자 보도자료(RG17-9703052)를 통하여, 콩나물은



국민 다소비식품임에도 최근 언론을 통해 농약검출사실이 반복적으로 보도되어 소비자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므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의 300개 콩나물 재배업소에 대한 재배환경 실태조사와 유통중인 콩나물을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배환경 실상과 농약사용의 원인을 분석, 학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콩나물 안전관리대책을 강구 하고자 하였다.

"콩나물은 버섯, 숙주나물 및 특수원예작물 재배와 같이 노지에서 재배하지 않고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에서 햇빛을 차단하여 재배하는 채소류로 분류되어, 종자콩 보급에서 재배까지는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유통단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되고 있음.

금번 실태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재배업소를 대상으로 시설일반현황, 재배환경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안전관리 대책으로 대부분의 재배업소가 영세하고 재배환경 및 유통실태 등이 열악하여 수거검사와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 하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콩나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배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여타시설 재배작물과 같이 안전한 종자콩 소독약제의 개발보급, 종자콩 보관 냉장시설, 종자콩 선별기, 살균소독설비, 용수정제 및 지하수 온도 조절시설, 온습도 조절설비 등 재배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육성과, 재배과정중 농약사용을 못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것이 긴요하므로 이를 주무부서인 농림부에 협조요청하고,

원료콩에서 불가피하게 이행되는 잔류농약에 대하여는 잔류농약의 이행정도와 유해정도 및 콩나물 섭취량 등을 조사연구하여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수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첨부하여 조사기간(96. 12. 9~12. 30) 중 전국재배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수거·검사결과 재배시설은 지상 영구건물이 아닌 비닐하우스(60%) 등으로서 주변환경이 불결한 주택지역이나 녹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대부분(86%) 50평 미만이고, 3명이하(92%) 종사자가 관리하는 영세업소가 대부분으로서 재배설비는 자동 또는 반자동 살수기를 갖추고 있을뿐(86%) 콩나물 부패방지에 필수적인 위생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함.

또한 업소의 영세성으로 종자콩은 두부용 수입콩이나 불량원료를 사용하고 실내 상온에서 보관하고 있어 종자 수침시 부패 방지와 발아촉진을 위해 일부 업소에서 약제소독을 하고 있으며, 재배업소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유통중인 콩나물 2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96년도(5~7월)국민 다소비 식품검사와 96. 11. 일제 수거·검사결과 총 1,516건 중, 18건(1.2%)만이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바 있다.는 A4용지 3배분량의 보도자료를 식품위생과장 명으로 발표하였고 다음날인 3월 6일 연합통신을 선두로 언론에 대서특필하기에 이르렀다.

그중 연합통신의 경우 "일부 콩나물업

체에서 농약사용한다"라는 제목과 콩소독을 위해 일부 농약을 사용하고 이것이 체내에 축척이 될 경우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제목에 곁들여 청와대 납품대상업체의 콩나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설문조사 내용중 주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만을 발췌하여 보도하게 되었고, 주요 일간신문들은 일부의 업체에서 콩나물 부패방지를 위하여 종자콩 수침시에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콩나물이 완전히 자랄때까지 매 3~4시간마다 한번씩 수십차례 물을 주기때문에 농약성분이 씻겨나가고 실지 이들업소에서 재배한 콩나물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검찰에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콩나물 재배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사실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식품위생법 위반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는 사항과 함께 보도하게 되었으며 이날 저녁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들도 일제히 콩나물에 대한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비교적 콩나물과 두채업계의 정황 등을 현실에 입각하여 취재·보도하여 했던 흔적이 보였다.

그러나 모 TV방송에서는 담당기자의 콩나물 취재결과 농약의 사용현황과 농약을 사용할 수 밖에없는 두채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보도내용을 전, 후반으로 나누어 보도하고자 취재를 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후반부의 농약사용이 불가피한 두채업계의 현실은 삭제되고 대신 재래시장으로 카메라를 옮겨 농약콩나물과 무공해 콩나물의 구별방법만 보도함으로서 마치 콩나물재배업자들을 악덕업자로만 매도하게 되었으며 후에 확인된 사항이지만 콩나물에 대하여는 주로 고발 형태의 부정적인 사항만을 취재·보도하려는 데스크의 보도방침이 작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콩나물의 소비격감

신문과 TV, 라디오 등 콩나물에 대한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콩나물의 소비는 완전 차단되었다.

다른때의 농약콩나물사건이 보도되었을때는 평상시에 비해 그래도 50~60% 정도의 소비는 있었으나 이번 경우는 그 양상이 전혀 빗나가고 시장에서, 슈퍼에서, 백화점에서, 식당에서의 모든 소비는 끊기어 버렸다.

심지어 모기업체의 구내식당의 영양사는 "자신이 영양사로 근무하는한 자신이 꾸미는 식단에서 콩나물은 영원히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치 않게 하고 있고, 모해물탕집을 찾은 손님은 해물탕에 콩나물을 넣지말라고 해놓고 자신이 어디선가 구해온 콩나물을 봉지에서 꺼내어 직접 끓여먹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콩나물의 계절별 소비를 보면 가을추수와 함께 각종채소들이 출하되면서 소비의 감소가 한겨울동안 이어지다가 음력 설과 정월대보름을 거치며 온도가 상승하고 겨울에 담가두었던 김장김치가

바닥이나고 남은것이나마 너무 익어서 싱싱한 채소가 한창 생각이 나지만 아직 봄채소가 출하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하는 대략 2월 초순부터 콩나물의 소비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봄채소의 출하개시이전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른다.

요즘은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채소가 한겨울동안에도 시장 어느곳에서나 넘쳐나기 때문에 양상이 좀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추세는 옛날과 크게 다를 바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콩나물 업계에서는 설과 대보름을 기점으로하여 노지에서 재배된 봄채소의 출하이전까지인 매년 4월까지를 콩나물 소비의 대목으로 생각하여 계획하고 준비한다.

허나 이런 소비추세가 고개를 막 들기 시작하는 3월초순(금년의 경우 작년 11월 농약콩나물 사건여파로 겨울동안 위축되어 왔고 소비증가의 시점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짐)하필이면 이때에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업계에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년간 우리 업계는 약 400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중 약 30%정도가 3, 4월에 판매되는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농약콩나물 사건의 보도가 있을경우 그 여파는 대개 1개월여가 경과하면 거의 사건이전으로 매출고가 회복되는 예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보도가 있은 후 3개월여가 경과된 현재, 매출고가 약간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상매출에 50%를 밑돌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어떤 콩나물 농약사건 보도때보다도 충격이 크고 그 기간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 이번 사태로 콩나물업계에는 약 5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을 초래할것이라는 예측을 하고있다.

이를 전체 2300여업소로 나눌경우 1개 업소당 평균 약 2000만원의 매출 손실을 초래하고 업소에 투자한 대부분(73.8%)이 5000만원 미만의 영세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볼때, 이번 사태가 우리업계에 준 타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시기 결정의 허실

보건복지부가 국민식생활 안전을 기하기위한 콩나물관리 개선방안마련을 위하여 콩나물재배 환경조사를 함에있어 콩나물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자고하는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과를 놓고 볼때 분명히 두채업계에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된것은 사실이다.

물론 콩나물 안전관리대책으로 양질의 종자콩보급과 재배시설의 현대화 등 시설개선과 무해소독제 개발보급 또는 잔류농약처분기준설정 여부의 검토와 입안과정중 언젠가 한번쯤은 언론에의 보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업계에서도 개선을 전제로 한다면 한번쯤의 진통은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들 하고있다.

그러나 그 발표시기가 하필이면 콩나물 수요가 가장 많은 3월 초순이냐 하는 것에는 졸속행정의 증거로 제시한다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물론 때와 같이하여 청와대 납품대상 업체의 콩나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것과 관련하여 보도시기의 결정을 놓고 고심(?)한 보건복지부의 나약하기만한 처사에 우리나라 전반의 행정체계를 보는 것같은 씁쓸함마져 갖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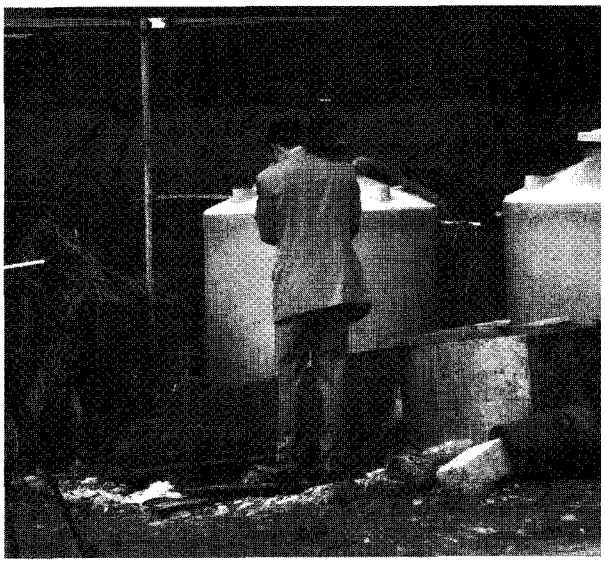
허나 엄연히 콩나물 생산자단체인 대한두채협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보도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한번쯤은 협의를 하던지 적어도 일주일전쯤에 통보를 해주어 사전에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업계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으로써 두채업계의 원망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콩나물 보도사건 이후의 정부대책

정부는 통계청고시 제91-1(91. 9. 9)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콩나물은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움막 및 기타 특정고정설비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재배활동과 노지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작물을 수경재배시설, 공장설비등과 같은 특수고정시설에서 특수한 기술과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라하여 버섯과 함께 「시설작물 생산업」(제 01140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본식품관리요령」(보사부고시 제 86-1호, 86. 1. 13)에서도 배추·무우와 함께 채소류로 분류하고 있고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보사부고시 제 89-6호, 89. 2. 20)에도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으로 규정하여 성분과 규격을 명시하여 놓아 적어도 정부 행정분류상 농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보건을 목적으로 콩나물을 식품위생차원에서 다루다보니 농산물이냐 가공식품이냐하는 시비속에 콩나물의 소관상 혼란을 초래했고 이런상태에서 일선관청 및 사직당국의 식품위생차원에서 마구잡이식 단속이 이루어져왔고 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언론보도는 유해콩나물과 악덕업주로만 매도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식품위생법상 콩나물의 관리는 유통중인 것을 수거·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비자 단체나 사직당국에서는 주로 재배업소에서 발아, 생장중에 있는 콩나물을 수거·검사하여 발표함으로서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국민불안감이 증폭됨을 우려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제도상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



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콩나물이 채소류인 농산물로 분류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종자보급에서 재배까지는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유통단계에서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것은 콩나물은 식품위생법상 수거검사등의 단속대상은 반드시 시중 유통중인것을 의미하고 그 이전의것 즉, 재배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또한 콩나물재배에 사용되는 원료콩에 대하여는 치오판, 캡탄, 카벤다 등 주로 종자소독 계통의 농약잔류허용을 0.2 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산물중 대부분(거의전부가 될 수도 있음)정부가 허용한 기준치 이상으로 농약이 잔류하고 있어 이런콩으로 콩나물을 재배할때 콩나물에서의 농약잔류는 불을보듯 뻔한 사실로서 단순히 콩나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 하여 재배업자가 처벌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제도의 허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좌우간 콩나물은 농산물인 채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채소나 농산물과 같은 합당한 대접(?)한번 받아본 사실도 없다. 그저 천덕꾸러기로 이리밀리고 저리 차이고 해당관청끼리의 소관시비 와중에 제도정착이나 지원한푼 받아보지 못한채 농약사건은 연례행사처럼 발생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신만 고조되고있는 현실이다. 지금 콩나물재배 업자들은 동내에서나 자신의 주변에서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콩나물의 입지가 그렇고 콩나물에대한 행정제도가 그렇고 콩나물에대한 사회인식이 그렇기 때문이다. 똑같은 하나의 국민이고 똑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을지인데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민다고들 하고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업을 당장 때려치우거나, 그렇치 못하면 시설이나 재배환경등을 개선한다면 지금보다 어느정도의 나은 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업계의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그대로 그저 영세할 뿐이다. 대부분 부부간에 몇푼의 자금을 투입하여 그저 인건비정도의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매처에서 콩나물값을 수금하여 원료콩 구입등의 직접비에 사용하고 나면 먹고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시설개선비 등으로 전환할 여유자금이 없다.

대부분 영세 주택지의 지하나 변두리 비닐하우스에서 햇빛을 차단한 음습한 상태에서 콩나물 썩음병의 주범인 미생물번식의 최적조건이 조성된 상태에서 부실한 원료콩과 오염된 지하수로 콩나물을 키워내고 있다. 그러니 유해콩나물 시비에 무방비할 수 밖에없고 갈수록 업자들만 악덕업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식품위생 전담부서인 보건복지부로선 콩나물 위생문제에 관하여는 업무상 한계에 봉착하여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우선 근본적으로 제일 시급한 양질의

종자콩을 보급하는 문제와 재배시설의 현대화등 시설개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콩나물 위생재배에 대한 근본 대책수립의 가능성이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콩나물에 대한 문제만 제기했을 뿐 현재까지 변변한 조치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콩나물재배시 농약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원료콩에서 불가피하게 이행되는경우 잔류농약의 이행정도, 콩나물의 섭취량, 농약별 유해정도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잔류농약 기준설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고 이것은 97년도 상반기중 식품위생연구원에서 그동안 수거 검사자료와 콩나물 섭취량, 농약별 유해정도를 조사연구 잔류농약 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현재는 연구기관을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로 옮겨 조사연구가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콩나물 보도사건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림부는 97. 3. 12 "콩나물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생산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에서

① 콩나물 생산업체에 대한 출하전 안전성에 대한 지도·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② 콩나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약안쓰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업계 자율결의대회의 확산, 불량업체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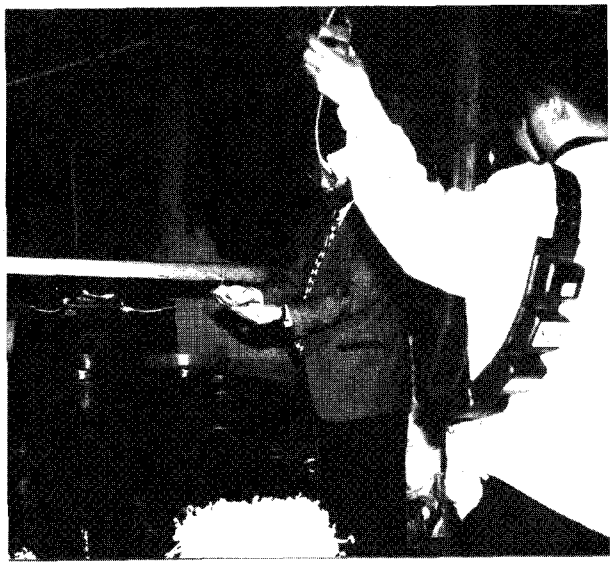
③ 콩나물 생산업체에대한 「무농약재배교육」의 실시로 양질의 콩나물을 생산하고

④ 품질인증제 확대실시로 무농약 콩나물재배의 정착을 도모하고,

⑤ 계약재배 등 품질이 우수한 원료콩의 생산·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⑥ 콩나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일부업계의 건의에 대하여는 농진청을 통해 안전성을 시험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는 몇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콩나물 생산자 단체인 대한두채협회를 주축으로 무농약재배의 결의대회와 청정콩나물재배 교육의 실시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콩나물의 안전성 검사와 품질인증제를 확대실시하는 등 무농약 콩나물 재배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의 수립과 함께 콩나물 재배업소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지원도 검토하는 등 뒤 늦었지만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청에 지시하여 콩나물



부패원인과 안전한 소독약제의 개발을 추진하는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담당자의 편견은 아직도 콩나물이 농산물이 아니고 가공식품이라는 해석에 의하여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다분이 내재되어 있고, 콩나물 농약사용의 허용은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논리성없는 주장에 의하여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허나 상추, 딸기, 고추, 토마토등 다른 채소의 농약잔류허용은 국민정서에 합당하고 유독 콩나물만이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콩나물은 재배기간이 여타 농산물에 비해 단기간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을 공급하고저하는 의도에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5PPM까지 허용되어 있는 일반채소 잔류허용치의 몇십분의 일이라도 콩나물에 허용되어야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콩나물은 농산물로써 여타농산물과의 형평에 어긋나서도 않되고 생물로서 적절한 방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것이다.

또한 일반 야채의 경우 거의 날것으로 먹는것에 비해 콩나물은 반드시 조리를 한후 먹기때문에 대부분 끓이는 과정에서 간혹 잔류되어 있을지 모르는 미량의 농약성분은 분해되어 실지로 먹을 수 있는 단계에서는 어느채소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부디 보건복지부나 농림부의 콩나물에 대한 이번대책이 일과용으로 끝내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심도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는것이다.

적당히 수습하고 골치아픈일은 그저 넘어가고 또다시 농약사건이 반복되고 하는 악순환을 이번으로 끝내야한다. 정부관계자들이 현명하다면 보다 멀리 내다보는 해결책과 악순환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날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